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60
----------	------

발의년월일 : 2019. 4.12.

발 의 의 원 : 김성태 의원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김혜정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

정천락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및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의 통로를 마련하여, 정책결정에서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과 운영 (안 제18조에서 제19조)

나. 위원의 임면과 회의의 개최 (안 제20조에서 제25조)

다. 시민참여단·전문연구단의 구성·운영 및 관련 조사·연구의 시행
(안 제27조에서 제29조)

라.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 (안 제30조에서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나. 예산 조치 : 예산조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정책”이란 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5. “공론화”란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4.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11조제2항 중 “갈등관리대상사업”을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 칙”을 “공론화위원회”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의 도출을 위해 시장 소속의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론화 의제 및 방식의 결정

2.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사안에 대한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전문연구단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론화 의제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19조(공론화위원회 구성)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공론화 의제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그 외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공론화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론화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제출한 날로 해산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론화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8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비밀유지)”를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2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주관한다.

- ②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 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여론의 수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7조(시민참여단 구성) 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전문연구단) ①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분과위원회) 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공론화지원단 설치 등) 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위원회 업무 지원
2. 공론화프로그램 전반 지원
3.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
4.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2조(최종결과 권고 및 공개 등) 공론화위원회는 상정된 의제에 대한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을 통해 권고하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제2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협의회, 공론화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공공정책”이란 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u><신설></u>	5. “공론화”란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갈등관리 대상사업</u>	2. <u>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갈등 대응계획</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u>	4. <u>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총괄업무 담당국장과 갈등관리대상사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 ⑨ (생 략)

제1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 략)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신 설>6. 공론화위원회 구성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갈등관리 대상사업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제6장 공론화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의 도출을 위해 시장 소속의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론화 의제 및 방식의 결정

2.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사

<신 설>

안에 대한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전문연구단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론화 의제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
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19조(공론화위원회 구성) ① 공론
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
은 공론화 의제 관련 부서의 국장으
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
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그 외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

<신 설>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수당지급 등)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4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당·여비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공론화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론화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제출한 날로 해산한다.

제34조 ~ 제36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1조(공론화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8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
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공론화위원회 위원에 제척·
기피·회피) ① 공론화위원회의 위
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
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
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공론화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로 소
집하고,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신 설>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 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제26조(여론의 수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제27조(시민참여단 구성) ①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제28조(전문연구단) ① 공론화위원회

는 의제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설>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분과위원회) 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1조(공론화지원단 설치 등) 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위원회 업무 지원

2. 공론화프로그램 전반 지원

<신 설>

3.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

4.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2조(최종결과 권고 및 공개 등) 공론화위원회는 상정된 의제에 대한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을 통해 권고하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협의회, 공론화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 전문연구
단 · 시민참여단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붙임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